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후속조치(안)에 대한 교수노조의 입장

교수노조는 지난 10월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상명대 지회 출범 성명서에서 총장이 첨단학과 관련 정원 원복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불행히도 우리의 우려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현실로 드러났다.

■ 첨단학과의 설치 배경과 내용은 이렇다.

2019년 교육부는 대학이 결손인원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학과’를 만들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이 임시적인 입학증원은 2024년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학과 간 정원조정을 연착륙시킬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결손인원이 많고 재정도 어려운 우리 대학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백웅기 전 총장은 양캠퍼스별로 직전 3년 평균 결손인원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만들되, 2024년 학과 인원감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 26명, 천안 20명 정도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그런데, 총장은 첨단학과를 실패로 편휘하며 전 총장의 출구전략을 외면하고, 왜곡된 결손율로 정한 하위 30% 학과에 정원축소분을 독박 씌우려 한다.

■ 높은 결손율의 책임은 교수가 아닌 법인에 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결손인원도 적었다면 굳이 첨단학과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손은 의대에서도 발생한다. 대학은 결손을 편입으로 메우는데, 저마다 교육부가 정한 편입비율을 따라야 한다. 편입비율은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수충원율, 법인전입금비율 등 4대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캠의 경우, 편입비율은 2017년까지 15%에 불과했고, 교수충원율이 개선된 이후 45%로 올랐다. 따라서 서울캠에서만 매년 결손 100명 당 45명만 채워지고 55명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교사확보율 차이로 천안캠은 서울 대비 약간 나을 뿐이다.

따라서 결손율은 학과 경쟁력이나 교수의 면담실적보다는 법인의 능력으로 좌우된다. 4대 지표 중 무엇 하나 변변치 않은 우리 법인이 그나마 단기에 올릴 수 있는 법인전입금비율에서는 아예 수도권에서 꼴찌인지 오래다.

■ 또다시 본부안에서 왜곡과 데이터 마사지의 냄새가 난다.

교수노조는 지난 10월 17일 책임예산제배정시수안 공청회에서 교무처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번 본부안에서는 노골적인 데이터 왜곡이 드러난다.

첫째, 기획부총장은 2020학년 정원을 분모로 2020~2022학년도 연평균 결손인원을 분자로 놓고 결손율을 계산하였다. 첨단학과 개설로 2021~2022학년에 서울과 천안에서 정원이 각각 77명과 62명이 늘었으므로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정원증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평균인 분자와 달리 분모가 증원 이전 2020년 정원이므로 결손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 **결손율을 과장**하여 결손은 교수 탓임을 내세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결손율을 제대로 재계산하여 학과 순위를 제시하라.

둘째, 첨단학과의 규모는 편입 및 재입학 인원을 반영한 **‘잔여결손인원’**으로 정해졌으므로 정원감축도 동일 기준을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2학년 결손인원만 고려하면, 첨단학과를 설치할 당시의 4년 이후 감축인원을 최소화하려 했던 의도를 저버리고 학과별 결손비율을 높게 보여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총장은 일단 편입비율을 높여 학과들이 편입 기회를 골고루 누릴 환경을 마련해 준 이후에 우리에게 결손율을 탓하라. 또한, 기획부총장은 학과별 잔여결손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부안이 명시한 서울캠 **사범대 정원조정분 12명을 확인**해야 한다. 교수노조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한 CK사업 정원조정 시, 사범대가 사범대 평가를 이유로 정원조정에서 빠지면서 일단 다른 학과에서 1명씩 추가로 빼고 나중에 돌려줄 인원이 19명이다. 본부안에서 근거로 제시된 ‘기획예산팀(서울)-982(2022.2.24.) 2024학년도 대학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조정’ 문서와 그 이전의 관련 문서를 비교하여 정확한 숫자를 밝혀야 한다.

■ 독박 쓸 하위 30%는 언제든지 법인과 총장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교수노조는 그간 무력한 총장을 지켜보며, 과거 구기현 전 총장이 학교 생존기반을 허물었던 정원감축(서울 7%, 천안 10%)이 재현될까 두렵다. 만약 내년

정원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총장의 행태를 보건대, 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 기준으로 축소 대상 학과들을 지정할 것이다. 심지어 블랙박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 일부 교수들은 자신의 학과는 문제없다며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지 모른다. 하지만, 불통과 기만에 젖은 갑질 경영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남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 소통을 통해 형평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라.

이 이슈는 정원을 물어놓은 학과는 원복, 사범대는 원래 합의한 대로 정원조정, 잔여분은 다른 학과에서 1~2명씩 줄이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존의 길이 있음에도 굳이 억지 우열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책임예산제배정시수안 → 현재 첨단학과 관련 정원 원복안 → 내년 정원축소 검토 등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의도가 날날이 드러날 것이다.

총장은 법인의 대리인이기보다 학교의 경영자로서 교수와 충분한 소통 아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사장과 총장이 전체교수회의에서 그렇게도 호소했던 대화를 실제로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찾아오라고? 교수들이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모른 체했던 그 좋던 시절은 지났다. 결손율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법인이 그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 모르면 당하나,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여 더 당한다!

교수노조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 교수노조가 전국규모 교수노조의 지회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많은 지지와 가입(<https://smuprourion.org>)을 부탁드립니다.

2022.12.5.

전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학교 지회장 이승우
sangmyungprofessorunion@gmail.com